

내년 국가예산 한푼이라도 더

김관영 도지사, 국회 예결위원 등과 집중 면담 갖고 지원 요청
새만금·지역경제 활성화 10대 건의사업 중심 중점 설득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도 국가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도에 따르면 14일 김관영 도지사는 국회를 방문해 정치권을 비롯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과 관련해 전북자치도의 미래가 달린 주요 사업들의 지원을 강력히 피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오가며 허영 예결위 간사, 신영대 예결위 위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운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건영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조배숙 예결위 위원 등 국회 예산심사 관련 주요 인사들과 잇따라 회동을 가졌다.

각 면담 자리마다 김 지사는 전북자치도의 핵심 사업들에 대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요청했다.

특히 김 지사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지사는 “새만금 사업은 전북특자치도의 사업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국가적 사업”이라며, “새만금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을 실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젊은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 △전통문화 계승과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등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 사업들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전북자치도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최근 박정 예결위원장을 만나 현안 사업을 건의한 이후, 다시 예결위원회를 찾은 김 지사는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10대 건의사업을 예결위원들에게 추가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요청을 이어갔다.

10대 건의사업에는 새만금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산업 육성, SOC 확충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김 지사는 “이 사업들은 전북자치도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들이다”며,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일정에서, 김 지사는 정대영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을 만나 전북자치도의 예산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4일 이른 아침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응원에 나섰다.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

도의회 교육위, 수능 응시자 응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 소속 의원들이 14일 이른 아침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응원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수능 응시자 수는 1만 7,041 명으로 전년도보다 236명 증가했다. 응시자들은 전북 14개 시군, 총 66개 시험장장교에서 시험을 치른다.

교육위원들은 도내 각지 시험장 학교를 찾아 긴장된 얼굴로 입장하는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말과 마음을 전했고, 수험생들은 환한 미소와 함께 “화이팅”을 외쳤다.

더불어 교육위원들은 자녀를 시험장에 들여보내고도 한동안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학부모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번 수능은 이날 오후 5시 45분(시험편의제공대상자 경우 7시 2분)에 종료되며, 수험생들의 성적표는 오는 12월 6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진행

기획행정위, 대외국제소통국·국제협력진흥원 등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4일 제415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고 대외국제소통국, 국제협력진흥원, 자원봉사센터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전북도 외국인 지원 업무가 유학생지원은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다문화는 복지여성보건국, 외국인 근로자는 대외국제소통국, 계절근로자는 농생명축산산업국 등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어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적인 지원 검토를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철지 부위원장(비례)은 지난 8월 임명된 중앙협력본부장은 도 비서실장 시절 대외협력 활동의 전면에 나서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국회와 정당 소통에 역할을 심본 발휘하여 앞으로는 중앙협력본부가 전북자치도 발전의 전초기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은 대외협력과의 중요업무인데도 소통의지가 부족하고 소극적

이다며, 정부보좌관 임명 이후 의회소통과 정부기능이 정부보좌관으로 단일화 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대외협력과장과 정부보좌관이 함께 의회와의 소통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해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전북자치도가 지역특화형 비자 703명의 전국 최대 쿼터를 확보했음에도 실제 모집 인력은 9월말 기준 295명으로 절반을 채우지 못하였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비자 역시 160명의 쿼터를 확보하였으나 모집인력이 52명으로 1/3수준이라며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2년 차에 접어들어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는커녕 작년 대비 모금액이 지난해 10월 1억 2,800만 원에서 올 10월 1억 2,000만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고향사랑기부제 구축 및 운영비용은 작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2023년 800만원→24년 1,500만원)했다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경제산업건설위, 기업유치지원실 대상... 미진한 업무 개선 요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4일 제415회 정례회 기간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티메프 사태에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들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질의하며, 도내 기업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애로 사항들을 청취해서 피해 구제를 제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의 취업률이 2022년 69%, 2023년 61%, 올해 9월 말 기준 30%로 대폭 감소한 점과 사업비 6억 원 중 해마다 25% 전후의 사업비를 반납하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이미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뒷북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이 사업의 운영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취업률 감소의 원인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 유치기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13,600개라고 발표했으나 민선 8기 이후 실제 채용은 107명뿐이고, 최근 5년간 도내 유치기업 271개

기업 중 신규 채용은 57개 기업에서 1,904명밖에 안된다는 점을 꼬집으며, 투자유치 보조금으로 최근 5년간 4천억 원을 지원을 했는데도 5년이 지나도록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기예 상황을 철저히하게 모니터링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수출액 중 중국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새만금은 대(對) 중국 관계에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대(對) 중국 수출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1개 기업이 22개 분야에서 4억 원 넘게 지원을 받았는데 매출실적이 오히려 줄어든 상황을 언급하며, 맞춤형으로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건 필요할 수 있겠으나 종합적인 효과성에 대한 결과 분석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고, 향후 지원 사업 중복지원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사업비 지원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환류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임종명 도의원, 문화관광재단
공무국외출장 ‘셀프 심사’ 질타

전북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임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2)은 14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전북문화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국의 여행 심사위원회의 부실 운영과 내국 위반 사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재단의 공무국외여행 23건 중 22건이 내부인사 3명, 외부인사 1명이라는 최소 구성으로만 심사가 이뤄졌다. 더욱이 사무처장의 최근 출장 심사는 심사위원이 3명에 그쳤고, 이 중 2명이 내부 직원이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외부 인사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상급자 출장 심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도내 기초의회 정례회 개최

무주군의회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36건의 일반의안 이외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정례회 첫 일정으로는 회기 첫 날인 14일 일반의안들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해당 안건들은 이후 각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오는 27일에 의결한다. 15일에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예정이며, 18일부터 26일까지 9일 동안은 2024년도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28일부터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2025년도 본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며 12일 군정질문이 실시한다. 마지막 날인 16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 및 2025년도 본예산안 의결 후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개회일인 14일 1차 본회의에서 이해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진수·무주영동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의회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본예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14일 열린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역화폐 국비 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과 ‘장수군 송전선로 통과 결사 반대 결의안’을 채택·의결 하였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등을 위해 본회의 휴회에 들어갔다.

바로 이어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남수)에서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전 부서와 읍·면, 장수한우지방공사를 대상으로 2024년도 군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국희)를 통해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바로잡습니다

○... 11월 14일자 16면에 게재된 “전북종합시각장 검색했더니, 성민돌 연결”과 관련, 본문에서 박정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장이 전북특별자치도체육공공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4일 서울 국회를 방문해 허영 예결위 간사(사진 왼쪽) 등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과 도정 주요 사업들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허위사실공표 폐지·당선무효 벌금형 상향

민주 박희승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폐지 등 선거 형질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경쟁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 인신공격 목적이 아닌 공직적격성에 대한 의혹 감증을 위해 확인하는 경우까지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가 될 수 있다.



특히,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벌금형 하한액이 5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위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로 인해 당선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한편, 현행법은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등의 기준을 선거범죄 형사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

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은 1991년부터 27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형벌의 경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5~10배 인상한 것과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형사재판은 범죄의 유무와 적절한 형량을 정하는 절차이지 공직선거 당선의 유·무효를 재판하는 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양형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당선무효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이에 박희승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고, ‘당선무효형 기준액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만호 기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오은미 도의원, 복지여성보건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3일 복지여성보건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아동들의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한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은미 의원(순창·진보당)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를 언급하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전문성을 갖고 도내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에 헌신해 왔지만, 여전히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해 종사자들이 불만과 절규가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오 의원은 “서울과 인천 등 타 광역시도에서는 31호봉까지 적용되고 있으나, 전북자치도는 여전히 10호봉 상한제에 묶여 있으며, 현재 10호봉초차도 100%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

고 비교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를 기준으로 중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자치도가 이를 위한 중장기적인 처우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예산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계획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기에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며, 앞으로 재정당국과 시군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만호 기자